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후 韓 저력 증명”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서

“국제 공급망 여전히 중요…日과 외교적 해결 노력
우리 강점 살려 핵심 소부장 자립, 특정국 의존 낮춰야
소부장 경쟁력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 협력 주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 수출규제 후 2년 동안 주력했던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자립화 노력에 관해 “우리 정부는 뭉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제적인 분업체제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지난 2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위기를 연이어 겪으며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위기 상황 때에 도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갖게 된 고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나가며,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 간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울여 온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부·장’ 분야 자립화에 동참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겼다.

문 대통령은 “기술 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지 2년이 됐다”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우리는 상상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 무엇보다 기본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법을 알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 소부장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손을 잡았다. 핵심기술을 빠르게 국산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증, 양산 과정까지 함께 전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힘껏 뒷받침했다. 정부 부처들 간에도 협업했다”며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까지 5조 8000억 원을 공급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 통관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다”면서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불화수소·불화플라이미드·포토티지스트)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이룬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됐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으로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소재들이었다.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화플라이미드는 자체 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이뤘다. TV 레지스트 또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다”며 “더

나아가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일본 의존도를 20%까지 줄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다. 통상 6년 이상 걸리던 기술개발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다”며 “불과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다.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도 다른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소부장 자립을 이뤄낸 경험과 자신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됐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도 정부와 민간,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모델이 가동됐다”며 “또한 온 국민이 함께 세계적인 방역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 해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첨단 제조업 역량과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자립화를 위해 기술개발 중인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뉴시스

낙후지역 에타 실시 균형발전 효과 고려

민주 윤준병 의원

국가재정 개정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낙후지역 에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은 경제적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전북 등 낙후지역의 건설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성 중심의 에타 평가체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낙후지역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제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에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기술·인력 격차를 타개해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성장판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국힘 정운천 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예결위에 이어, 21대 국회 임기 2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6년 연속 예결위원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호남 예산의 청구 역할은 물론 영·호남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진정한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해 정 위원장을 특별히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의 6년 연속 예결위원 선임에 호남지역 지자체 공무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5년 간 정운천 위원장은 전북은 물론 호남 전체 예산의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호남동행 국회의원들과 함께, 호남지역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6년 연속 예결위원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55명의 호남동행의원들과 함께 가장 홀대받던 호남 예산들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사상 최대 호남 예산을 확보하고, 영·호남 공동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불법 요양병원 운영 수습업원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역 3년형’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습업원대 요양급여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을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참여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최씨는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가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
잔고증명서 위조
불구속 기소건은
현재 재판 진행중

또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벌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아 불구속 처분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같이 무더졌다”며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다. /뉴시스



“전북 상용차산업 화이팅”

지난 2일 제3차 전북도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가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우범기 정무부지사, 박성일 안주군수, 금숙노조 전북지부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완주 구와용·배수로 개발방식 건의할 것”

송지용 도의회 의장
LH 시행 사업현장 방문
개거·수문 높이 같아
수위상승 시 피해 우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농업용 배수로 공사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송 의장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 중인 완주군 삼계읍 구와용·배수로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 지역은 개거와 수문 높이가 같아 수위상승 시 주변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배수로 높이보다 낮은 수위 유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업 현장 인근 농민들은 그동안 침수 및 재해 우려 등 민원을 제기했지만, LH와 농어촌공사 측은 농민들의

의견을 따먹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송 의장은 이날 LH 전북본부 익산사업소장 및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주요임원실지사장, 인근 주민들과 함께 구와용·배수로 조성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새금포항 고속도로와 삼봉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우수 처리를 농업용 배수로에 설치,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집중호우 발생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수문 구멍(Block Out) 확보 및 안전펜스 설치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도심지역 개발이 팽창하면서 구와용·배수로 개발사업과 같은 농업용 배수로에 우수처리방식은 큰 재난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배수로 골격이 심하거나 경지경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에 용·배수로 설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 의견 기구화, 주변 여건에 맞춰 설계 개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이 같은 문제는 현재 LH가 추진하는 전주 탄소산단 개발사업도 같은 상황”이라며 “농업용 배수로 공사가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개발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구와용·배수로에 설치된 수문에 구멍(Block Out)을 확보하고 개거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 12일까지 ‘열린 토론회’ 참가 신청 접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회에 대학생부 참가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ttas.go.kr)를 통해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 재학생(휴학생, 외국인도 가능) 2인 1팀으로 구성해 신청해야

예선전은 온라인방식의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대학생부 64개팀은 오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32개팀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7일에 열린다.

본선투표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유호상 기자